

농식품부, 일석다조 효과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17개 군으로 확대

〈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행정표기순) 7개 군 추가 선정 〉
-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한 7개 군 지역에 8월부터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下~'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추가로 공모하여 7개 군(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 행정표기순)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인구 감소 지역의 10개 군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감소해 왔던 10개 군의 인구는 시범사업이 도입된 후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도 13.7% 증가하는 등 지역 활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상지역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경으로 관련 예산(706억 원)을 확보해 추가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 공모(4.20.~5.7.) → 서류평가(5.11.~5.29.) → 발표평가(6.9.) → 선정결과 발표(6.11.)

추가공모 접수 결과,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총 44개 군이 신청(경쟁률 8.8대1)하였고, 농식품부는 공정한 선정 절차를 위해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평가를 실시하였다.

선정평가 항목에는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 연계 지역활력 제고 계획 등이 포함되었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역발전 지수와 ▲지역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 제시, ▲지방비 확보 등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후보지 10개 군은 행정력과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지역의 강점과 발전 가능성을 담은 발표를 준비해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2차 발표평가에 임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 그룹의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행정표기준)이 선정되었다. 이는, 예산 규모(706억 원, 19.6만 명) 내에서 평가 순위 순으로 7개 군을 선정한 결과이다.

이번에 선정된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는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 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운영된다. 사용처는 중심지(읍)·특정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생활권 형태별로 설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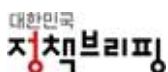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을 제공하여 추가 선정된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준비 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가와 함께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를 통해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선정 지역
 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희중 (044-201-2811)
		담당자	사무관	박건우 (044-201-2817)



지역	유형	지역별 특성
화천	지역재원 창출형	· 산천어축제 및 지역자산 공유화를 통한 수익금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 제시 · 접경지역 및 상수원 보호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 제약, 기본소득 도입 정책효과 검증 · 기본소득을 활용한 민관협력 기반의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 및 지역문제 해결형 방안 제시
보은	일반형	· 자체 추가재원 활용 모델(+1만원)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 기대 · 기본소득 접목을 통한 참여형 공동체 운영 및 활성화 등으로 주민중심 공동체 회복효과 검증 · 액션그룹 기반 생활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모델 및 통합 추진 전략 등 제시
진안	일반형	· 자체 기본소득 지급 준비 기 편성 및 진안형 생활서비스 제공 모델을 통한 지역활력 효과 검증 · 기본소득을 활용한 연대기금 조성 및 창업 지원, 재투자 등 4단계 지역 내 선순환 모델 제시 · 산악지형 및 용담댐 규제로 지역발전 제약, 농림업 중심 지역에 기본소득 도입 효과 검증
무주	일반형	· 보전지역 비중 78.5%인 상황에서 무주형 기본소득 선제 시행('26, 연 8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재적립 등 지역 내 소비강화 및 순환경제 효과 검증 · 기본소득과 공유자원을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 기대
구례	일반형	· 기본소득과 연계한 구례 3종페이백(균형농특산물&면단위, 순환가맹점 간 B2B, 연대사회적경제 업종) 모델 운영으로 지역순환경제 구축 효과 검증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활용한 연계 강화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효과 등 검증
보성	일반형	· 예산절감 및 자체기금 등을 활용한 자체 추가재원 활용 모델(+5만원) 제시 · 읍 단위 집중 방지를 위한 생활권별(A/B/C) 차등 캐시백 도입 등으로 소비쏠림 완화 검증 · 지역사회서비스(주거, 생활, 건강, 생활편의 등) 활성화 효과 검증 및 농촌재생 모델 제시
청송	일반형	·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과 '8282 생활돌봄 플랫폼'을 통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효과 검증 · 기본소득+지역화폐(캐시백 구매 할인 등) 시너지 모델 제시 및 지역 내 선순환 밸류체인 구축 · 초대형 산불('25)로 인해 생활기반 피해, 정주여건 등과 연계한 기본소득 도입 효과 검증

붙임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 **(추진목적)**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
- **(지원내용)**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
 - **(사업기간)** '26~'27년(2년간) * '26년 국비: 304,705백만원(추경 70,630 포함)
 - **(당초지역)**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8개 도, 10개 군)
 - **(추가지역)**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5개 도, 7개 군) * 추가지역은 8월부터 첫 지급
- **(지급절차)** 신청(상시, 최초 1회 신청) → 자격 확인(매월 1일~20일경, 읍·면) → 지급 대상자 결정(매월 20일경, 읍·면위원회) → 지급(매월 말, 군)
 - **(신청대상)**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지급)** 신청자 자격 확인을 거쳐 매월 말 지급. 단,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지급(3개월 분)
- **(사용지역)** 거주 지역 내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지정하여 사용 가능
- **(사용처)** 중심지(읍)·특정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 생활권 형태별로 사용처 설정
 - **(읍)** 모든 면에서 사용, 주유소·편의점 합산 최대 5만원* 사용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제한적으로 허용된 도서 지역 읍 하나로마트 및 면 하나로마트 사용금액 포함
 - **(읍과 하나의 생활권인 면)** 모든 면에서 사용, 읍 내 가맹점 및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하여 최대 5만원 사용
* 면 하나로마트가 지방정부와 MOU를 통해 상생활동, 사회적 기부를 하는 경우 조건부 허용
 - **(읍과 별개의 생활권인 면)** 모든 면에서 사용, 중심지 집중 업종*은 제한 없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합산하여 최대 5만원 사용
*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 **(사용기한)** 읍 주민은 지급월의 익월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면 주민은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설정